



2026 사법제도 대변혁에 따른 기업 경영의 새로운 리스크와 대응

2026.03.04

I. 서언: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일대 변화

2026년 2월 말,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 도입), 형법(법외곡죄 신설),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으로 구성된 소위 '사법개혁 3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3월 5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률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기로 의결함으로써 1948년 건국 이후 유지되어 온 사법체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법제도 개편은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 '사법 리스크의 상시화'와 '분쟁 종결의 불확실성 증대'라는 두 가지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법개혁 3법의 핵심 내용과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II. 사법개혁 3법의 핵심 내용과 쟁점 및 Risk

1. 형법 개정: '법외곡죄'의 신설에 따른 수사 및 재판 환경의 변화

법외곡죄는 형사사건에서 판사나 검사 또는 수사관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거나 사실을 은폐·조작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핵심 내용:** 판사 또는 검사, 수사관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중인 형사사건에서 법령을 왜곡하여 적용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외곡 행위의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합리적 범위 내 해석·재량 판단은 법외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명시된 만큼, 모든 적극적 해석에 대해 곧바로 처벌 리스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법령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단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제외
-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그 증거 사용의 경우
- 위법한 방법에 의한 증거 수집,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 **예상 쟁점 및 Risk:** '법왜곡' 행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및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등과 같은 주관적 요건을 중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구성 요건 충족에 관한 입증 부담이 쉽게 풀릴 수 있으나, 그 존재만으로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법 해석이 위촉될 우려가 큼. 이는 기업 관련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검찰 및 법원이 책임 회피를 위해 더욱 기계적이고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를 경우 유연하거나 전략적인 '경영 판단'이 배임이나 횡령으로 기계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증폭될 수 있으므로, 법 시행 이후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한편,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이해관계인들이 재심사유 등을 만들기 위하여 판사나 검사 또는 수사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헌법재판소법 개정: '재판소원' 도입과 4심제의 현실화 가능성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가 기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판결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핵심 내용:**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① 현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②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③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 **예상 쟁점 및 Risk:** 재판소원제가 도입됨에 따라 재판이 사실상의 '4심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재판소원이 제기된 경우, 유사쟁점의 사건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살펴보기 위해 재판 진행을 늦출 수도 있어 소송지연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음. 아울러 기업 간 대규모 손해배상이나 경영권 분쟁 사건의 경우 패소 측이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재판소원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음. 이는 결국 분쟁 해결의 지연 및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임.

3.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에 따른 상고심 구조 개편

대법관 수는 현행 14명에서 총 26명까지 늘어나며, 법 공포 2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되는 방식으로 단계적 확대가 이뤄짐. 따라서 상고심 구조 변화와 판례 지형 변화는 단기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누적될 가능성이 큼.

- **핵심 내용:** 상고심 사건의 심도 있는 심리를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고, 전문 법정(금융, 지식재산권, 노동 등)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예상 쟁점과 Risk:** 대법관 수의 증원으로 소부(小部)가 늘어나고 전문부가 신설되어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금융·공정거래 등 복잡한 기업 사건에 대한 전문 심리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그러나 이와 동시에 소부(小部)가 늘어남에 따라 재판부간 판결의 충돌이나 일관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판례 변경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한편, 대법관 수의 증원으로 대법원 구성이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입장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 측면에서 보다 다양화될 것이므로 상고심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대법관 개인의 성향과 전문 분야의 파악 및 이를 고려한 소송 전략의 수립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III.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 및 실무적 리스크 분석

1. 경영 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 위축

법왜곡죄 시행으로 인해 검찰은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심사할 때,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 즉 법리 해석을 유연하게 하다가 '법왜곡' 오해를 사는 것을 경계하게 됨에 따라, 경영상의 모험이나 전략적 투자를 '배임'으로 기소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음.

2. 분쟁 해결의 지연에 따른 경영의 불확실성 증대

재판소원제는 기업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승소한 기업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집행이 정지되거나 결과가 뒤집힐 위험을 안고 가야 하며, 반면에 패소를 당한 기업에게는 추가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분쟁해결의 지연은 결국 기업들에게 경영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3. 상고심 변론 전략의 재구축

대법관 증원으로 인해 과거처럼 '법리오해' 위주의 일률적인 상고이유서로는 승소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세부 전공별로 사건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므로, 금융·IT·IP·공정거래 등 각 분야의 고도화된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정치하고 구체적으로 상고이유를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IV. 기업의 선제적 대응전략 가이드

1. 사법 리스크의 상시화·분쟁 종결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증거력' 강화

이제는 단순히 '적법하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사회 및 경영회의 시 외부 법률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기록한 [Strategic Decision Memo]를 상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수사기관이 법왜곡죄 프레임에 갇힐 경우 이에 대항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헌법적 쟁점'을 고려한 소송전략의 수립

재판소원 시대를 맞아 1심과 2심에서부터 '기본권 침해' 논리에 대한 검토를 병행해야 하는 사건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아울러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비로소 헌법소원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초기부터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증거를 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송대리인 선정 시 민·형사 전문성뿐만 아니라 헌법적 시각을 가진 팀·전문가의 유무 및 관여 가능성 등도 당연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3. 대법원 구성 변화에 따른 맞춤형 모니터링

증원되는 대법관들의 과거 판결문, 논문, 전문분야 등을 파악·분석하고, 사법부의 인적 구성 변화가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 미칠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진행 중인 주요 소송의 변론 방향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V. 법무법인(유) 세종의 조력 방안

2년 뒤에 시작되는 대법관 증원과는 달리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급변하는 사법 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 지식을 넘어선 '전략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귀사의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보좌하고 제기되는 소송에서의 승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드릴 것입니다.

다.

1. 전 단계(Full-Cycle) 통합 대응 시스템

법무법인(유) 세종은 사법개혁 3법이 미치는 영향력을 수사 단계부터 헌법재판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 **수사 및 1, 2심:** 법왜곡죄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사실관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정교한 논리를 구축합니다.
- **상고심 및 재판소원:** 민·형사 판결이 헌법적 쟁점으로 번질 경우를 대비해 1심부터 최종심까지 일관된 헌법적 방어논리를 병행 배치하고, 2년 뒤부터 대법관 증원에 따른 상고심의 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감안한 소송 전략을 마련합니다.

2. 고도화된 지식 공유 및 판례 분석 인프라

법무법인(유) 세종은 수십 년간 축적된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기업·금융 분쟁 승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자산화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 기반 전략:** 단순한 경험칙이 아닌, 유사 사건의 판결 경향성과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들의 성향을 정밀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승소 확률을 극대화하는 변론 전략을 도출합니다.
- **정예 인력의 협업:** 각 분야의 베테랑 변호사들이 실시간으로 최신 입법 동향과 하위 법령의 변화를 공유하며, 사건에 가장 적합한 최신 법리를 도출하여 즉각 반영합니다. 특히 민·형사나 행정 사건 재판에서 하급심부터 헌법적 쟁점을 감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을 수행합니다.

3. 역량 있는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한 실전적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은 현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깊이 있고 두터운 맨파워:**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재판 실무를 경험하며 주도했던 전문가들 및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직접 사건을 지휘합니다.
- **실전적 솔루션:** 재판부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바뀐 사법절차 내에서 기업고객의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는 '실전적 해법'을 제시합니다.

4. 기업 맞춤형 'Pre-emptive(선제적)' 리스크 관리

분쟁이 발생한 후의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 **경영 자문 연계:** 사법개혁 3법의 시행에 맞춰 귀사의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왜곡죄나 재판소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보완해 드립니다.

VI. 결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파트너십

사법 환경의 변화는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위협으로 다가오지만, 이에 대응하는 법무 전략의 수준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된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은 귀사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Strategic Navigator'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 외에도 귀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리스크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구성원

최창영

대표변호사

02-316-1947

cychoi@shinkim.com

문희춘

변호사

02-316-4051

hcmoon@shinkim.com

이숙미

변호사

02-316-4016

smlee@shinkim.com

이원

변호사

02-316-4406

wlee@shinkim.com

최복기

변호사

02-316-1613

bgchoi@shinkim.com